



삼일회계법인

# 이재명 정부 ESG 정책 방향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전환

Sustainability Platform | July 2025



# Table of Contents

<b>Intro</b>	<b>02</b>
<b>I.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 방향: '적극적 ESG 강화 기조'</b>	<b>03</b>
1.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추진	03
2. ESG 평가 강화 및 투자환경 조성	04
3.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04
4. 기후에너지부 신설	05
5. 녹색금융공사 설립	05
<b>II. ESG 부문별 상세 정책 방향</b>	<b>06</b>
1. '환경(Environment)'	06
2. '사회(Social)'	08
3. '거버넌스(Governance)'	10
<b>III. 기업 대응 방안</b>	<b>12</b>
1. ESG 전략 수립을 위한 규제 분석과 공시 기준 활용	12
2.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외부 기회 창출	13
3. ESG 전략 실행의 핵심: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과 관심	14

# Intro

지난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정부는 ESG를 단순한 규제 수단이 아닌,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공약 단계에서부터 ESG 공시 의무화,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거버넌스 개편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왔다. 지난 6월 17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이러한 정책 방향이 구체화되었으며, 향후 국정과제 채택 여부와 정부의 공식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 정책 변화는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ESG를 산업·금융·거버넌스 전반에 통합하려는 구조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 에너지 전환, 녹색금융 확대,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통해 ESG를 국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동시에 글로벌 차원에서도 ESG는 각국이 자국의 무역, 산업, 금융 전략을 재편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과 주 정부 간의 규제 불일치 속에서도 ESG를 무역 및 공급망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올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ESG 규제를 통합·조정하며 효율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국가들 또한 자국 특성을 반영한 ESG 공시 기준 정비와 제도적 기반 강화를 통해 글로벌 흐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외 ESG 정책 환경은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한국은 정책적 과도기를 지나 ESG를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삼는 전환점에 도달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경영 전략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 보고서는 이재명 부의 ESG 정책 방향과 구조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 대응 방안을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I.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 방향: ‘적극적 ESG 강화 기조’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이었다. 이는 환경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한 ESG 강화 기조의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정부 정책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기준에서 본 ESG 정책은 △ESG 공시의무화 조기 추진, △ESG평가 강화 및 투자환경 조성,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기후에너지부 신설,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 다섯 가지 주요 방향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 1. ESG 공시 의무화 조기 추진

ESG 공시 의무화 정책은 2021년 1월,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해 처음 제시됐다. 당시 정부는 20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겠다는 단계적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기준을 반영한 국내 기준 마련이 추진되어, 이를 위해 2022년 12월, 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가 설립됐다.

2023년 10월, 금융위원회는 ESG 금융추진단 회의를 통해 당초 2025년으로 예정되었던 ESG 공시 의무화 시점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 준비 부족, 국제 기준 확정 지연, 주요국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한편,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는 별개로 기업들의 공시 기준의 명확화 요구에 따라, KSSB는 2024년 4월 ESG 공시 기준 초안을 발표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간 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했다. 초안은 일반사항(제1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제2호), 선택 공시사항(제101호) 등으로 구성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2024년 12월 중 의결을 목표로 준비 중이었다. 그러나 12월 23일 열린 KSSB 자문단 회의에서는 기준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들에게 보고만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최종 공시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및 정책질의서 응답을 통해 ESG 지속가능성 공시의 조기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에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기존 자본시장법 개정보다는 별도의 ESG 기본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정부는 ESG 공시 의무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2025년 연내 ESG 공시 의무화 로드맵과 최종 기준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 멈춰져 있던 ESG 공시 의무화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 2. ESG 평가 강화 및 투자환경 조성

이재명 정부는 ESG 경영을 자본시장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하고자, ESG 통합평가지표 마련과 법제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국내 ESG 평가체계는 민간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합된 평가지표의 부재로 인해 ESG 평가 기준과 결과가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로 동일 기업에 대해 평가기관마다 상이한 등급을 부여하는 등 신뢰성과 일관성 부족이 지속되면서, 기업과 투자자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환경(E), 사회(S), 거버넌스(G) 요소를 균형 있게 반영한 ESG 평가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ESG 생태계에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공시 기준과, 이를 해석하고 비교하는 평가 기준이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평가 기준은 공시된 정보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는 ESG 통합평가지표를 단순한 평가 도구를 넘어, 정책금융 인센티브 제공, 공공조달 우대, 세제 혜택,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의 투자 기준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의 기준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선 공약을 통해, ESG 경영 우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의 넷제로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기업의 환경 책임 강화

이재명 정부는 대선 준비 과정에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을 10대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며, ESG 강화 기초의 출발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의 기후 전략에 대한 외부 감시와 주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수단으로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은 기업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공시하고, 이에 대해 주주들이 의견을 표명하거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21년부터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4월, 프랑스 국회는 해당 제도의 법제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으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조사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총 28건의 Say on Climate 주주총회 표결이 이뤄졌다. 이는 2023년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MSCI는 이를 제도가 단기적 유행을 넘어 일정 수준의 기업 참여가 지속되는 안정적인 주주 참여 구조로 자리잡고 있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전체 표결의 79%가 유럽 기업에서 발생한 점은,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의 영향력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 제도를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며, 세부 실행 방안은 향후 정책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 4. 기후에너지부 신설

탄소중립과 ESG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정책 설계의 핵심 축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분산된 관련 기능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간 연계성과 추진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상쇄해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에너지 정책과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며,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은 본질적으로 상호 보완적이다.

그러나 현재 행정부의 역할과 조직 구조는 이러한 목표 달성에 여러 제약을 안고 있다. 에너지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기후변화 대응은 환경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어, 탄소중립 목표 설정과 에너지 수급·기술 전환 간의 정책 연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예를 들어,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산업부가 별도로 수립한 에너지 수급 계획이나 산업계 기술 전환 전략과 조율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후·에너지 정책을 통합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 확정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5. 녹색금융공사 설립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기술 혁신과 정책 수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초기 투자 위험이 크거나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서는 민간 자본의 유입이 제한되므로, 이를 보완할 공적 금융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정부는 녹색금융공사 설립을 전략적 정책 수단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친환경 산업의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2025년 51.7조 원 규모의 기후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제조업 등 녹색산업 전반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를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공적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 and 전략적 자금 투입을 본격화하고 있다. 녹색금융공사는 이러한 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고 운용할 핵심 기관으로 기능할 전망이며, 기후금융 공급 계획이 자금 투입의 전략적 틀이라면, 녹색금융공사는 그 실행 인프라로 볼 수 있다.

녹색금융공사는 단순한 자금 공급을 넘어, 녹색채권·지속가능채권·녹색보증 등 금융상품 개발,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기반 금융 지원, K-Taxonomy(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연계 운용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녹색금융 생태계의 질적 고도화와 구조적 정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PPA 제도 개선',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의 성장 3대 전략에 따른 5대 과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는 녹색금융의 실질적 수요를 창출하고, 공적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

아울러, 공적 금융기관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해 넷제로 목표 설정, 금융배출량 측정 지표 도입 등 기후리스크 반영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녹색금융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 II. ESG 부문별 상세 정책 방향

### 1. 환경 (Environmental)

이재명 정부의 환경 정책은 단순한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산업 기회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기업에게는 탈탄소 전환이라는 부담과 동시에, 녹색기술 기반의 신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양면적 과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 ① 재생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인프라 구축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재생에너지 확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의 활성화와 태양광 설치 관련 규제 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간 주도의 에너지 조달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둘째, 국가 차원의 공급 기반 확대와 에너지 믹스 조정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서남해·제주 지역의 해상 풍력 클러스터와 동해안 부유식 풍력단지 구축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AI 및 첨단 산업의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등 저탄소 전원을 포함한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재생에너지의 계통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전력망 인프라 확충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2040년까지 한반도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고,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할 수 있는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 기반의 에너지 생태계 조성도 주요 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수요지 인근에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분산형 에너지 체계가 도입되고, 통합발전소(VPP), 에너지저장장치(ESS), 그린수소 연계 등을 통해 지역 에너지 자립도가 제고될 전망이다. 특히 농가 태양광 설치 지원과 지자체 인센티브 확대는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보완적 정책으로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 ②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한국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전기,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구조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 단기적인 탄소 제거가 어려운 만큼, 수소환원 제철, 나프타 열분해 저탄소화, 친환경 연료 추진선, 화이트 바이오 등 중기술 중심의 저탄소 공정 도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R&D 지원 체계를 탄소중립형으로 전환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술 혁신과 친환경 설비 전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동시에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그린모빌리티, 산업 순환경제, 선박·건설기계·농기계의 전동화 등 탄소중립 신기술 개발과 수소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전국 6곳에 지정된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를 친환경화하여 지역별 에너지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도 함께 추진된다. 또한, 2040년까지 폐쇄가 예정된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특구'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민과 노동자의 고용 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③ 자원순환 및 탈플라스틱 전략

2025년 대선 공약 발표 당시, '국가 차원의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과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전략 육성'이 자원순환 전략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바 있다.

이후 발표된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는 '화이트 바이오' 등 친환경 주력산업의 저탄소 신기술에 대한 R&D 강화가 언급되었으며, 이는 자원순환 기반 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다. 향후 관련 정책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될지에 대한 정책적 진전과 이행 과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④ 탄소중립 목표 및 제도적 기반 강화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이는 단순히 글로벌 고탄소배출국인 한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20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기존 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대응의 성격도 포함한다. 당시 현재는 기존 법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만 제시하고, 2031~2049년 중장기 목표는 공백 상태라며, 환경권 침해를 이유로 2026년 2월까지의 법 개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탄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현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법 개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31~2049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초안 마련
-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 종합 검토

이번 개정은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기후 대응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RE100 가입, 탄소배출권 구매 등으로 인한 탈탄소 전환 비용 증가
- 고탄소 산업 내 사업구조 전환 및 저탄소 기술 도입 요구 증대
- 재생에너지, 친환경 소재 등 녹색기술 기반 신사업 확대 가능성

이러한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운영비용 및 규제 대응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녹색기술 기반의 신사업 발굴과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구조적 전환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환경 정책 방향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기술 혁신과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사회 (Social)

이재명 정부의 사회 정책은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 불평등 완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을 제도적으로 강화하여,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으로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유도한다.

### ① 노동시장 개혁

정부는 노동시장 전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혁을 추진한다. 21대 대선 공약에 따라 노동조합법 제2조 및 제3조 개정<sup>1</sup>을 통해 하청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플랫폼 노동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도 법적 보호를 확대하여 '일터 권리'를 확립할 계획이다.

장시간 노동과 무임금 노동의 원인으로 지적된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여 금지하고, 실근로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하고, 직무·직위·근속 등을 반영한 임금분포제를 도입하여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구축한다.

산업·업종·지역 단위의 단체교섭협약을 활성화하여 노동자의 집단적 목소리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모델을 선도적으로 구축한다. 직장 내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근로자 대표 위원회 상설화, 대표 선출 및 역할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도 포함된다.

### ② 불평등 완화

21대 대선 공약에 따라,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에 성별 평등 지표를 적극 반영하여 공공부문이 사회 불평등 해소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유도한다. 다만,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는 해당 제도의 실행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향후 구체화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성별, 고용형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 등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성장을 실감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목표와도 일치한다.

### ③ 안전보건 강화

공급망 내 안전 대책과 연계하여, 정부는 '일하다 다치거나 죽지 않게'라는 원칙 아래 노동안전보건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법 개정뿐 아니라 제도, 행정, 정보공개 등 다층적 접근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종합 정책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노동자를 포괄하는 법체계로 개편되며, 건설 공사 전 과정에 걸친 안전 대책 강화, 중대 재해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노동안전보건청(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이 제안되었으며, '전국민 산재보험제' 도입과 '국가책임제'도 함께 추진된다.

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투자 규모, 활동 실적, 산재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는 '안전보건공시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sup>1</sup>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노동자의 쟁의권(파업 등)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경감하는 법안

## ④ 공급망 보호

정부는 공급망의 안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적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하청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 명확화를 위해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은 21대 대선 공약에서 발표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안전 조치에 그치지 않고, 공급망 내 책임 구조를 재편하고, 하청의 권익을 보호하며,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려는 구조적 접근이다.

또한, 납품 단가 연동제 등 제도적 장치를 통해 원청과 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의 작업 환경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공급망 구조의 개선은 산업재해와 같은 결과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안전보건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 ⑤ 중소기업 동반성장

중소기업을 경제 하위 주체가 아닌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하고, 교섭력 강화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합리적인 거래 계약을 확산하고, 금융기관이 중소기업과 얼마나 잘 협력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 플랫폼 예산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 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근로자가 일하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인건비, 공급망 관리 비용 및 상생 지원, 안전 시스템 구축 등 운영비용 증가
- 인사·노무 관련 정보공개 및 관리 체계 정비 필요

이러한 사회 부문 정책 변화는 단기적으로 기업의 운영비용과 제도 대응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 신뢰 확보, 인재 유치, 공급망 안정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EU의 CSDDD\*와 같은 글로벌 공급망 실사 규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에 따라 기업은 국내 정책 변화와 국제 규제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직문화 개선, 인권 및 노동 기준 강화,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는 EU가 도입한 규제로 기업이 자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를 예방·완화·보고할 법적 책임을 지도록 요구한다.

전 세계 약 7,000여 개의 대기업들이 CSDDD의 직접 적용 대상이지만, 고객사가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인권 및 환경 리스크를 관리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 즉,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기업은 규제 준수 체계의 일부로 간주된다.

이 지침은 환경(E)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사회(S) 영역—특히 노동권, 인권, 다양성, 안전보건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국내 정책 대응 전략과의 연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 3. 거버넌스 (Governance)

거버넌스 정책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운영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한 구조적 개혁으로서 오랜 과제로 지적되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다.

#### ① 거버넌스 개혁

정부는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주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었다. 또한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이 포함되었다. 이는 감사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감시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한편,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기존 1명 → 2명 이상)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후속 논의를 통해 추가 개정이 검토될 예정이다.

#### ② 공정한 시장 질서 조성

자본시장 내 공정성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된다. 특히,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sup>2</sup>를 통해 주가조작, 시세조정 등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퇴출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상장사 임직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중요 전과기록 공시 확대, 금융회사 미공개정보 이용 제재 강화, 사모펀드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은 정보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 내 책임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sup>3</sup> 도입도 추진된다. 이는 자본시장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 구축을 위한 핵심 장치로 제시되었다.

<sup>2</sup>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주식시장에서 고의적이고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가 단 한 번 적발되더라도 해당 거래자를 시장에서 퇴출하거나 강력하게 제재하는 제도이다

<sup>3</sup>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는 불법 행위로 피해 입은 투자자에게 소송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벌금 및 과징금이나 불법 행위자의 부당이득 환수금을 활용하게 된다.

### ③ 사익 편취 금지

21대 대선 공약에서 명시된 내용에 따라, 대기업 중심의 거버넌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가 강화된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돼 일반주주의 의결권 약화 등의 문제를 야기했던 자사주에 대해, 원칙적 소각 근거를 마련하고 기보유 자사주에 대해서는 합리적 규제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대한 신주 물량 배정을 제도화하고, 소액주주 보호계획 제출 및 공시 의무화를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업 인수 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일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주주 및 경영진의 기업가치 제고 유인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상장기업의 인수·합병가액 결정 시 공정가액 적용, 계열사 합병 시 합병감사인 제도 도입, 부당 내부 거래 감시 및 제재 강화 등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검토되고 있다.

####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 고도화 등 거버넌스 변화 필요
-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 및 주주 권익 보호에 따른 경영 리스크 관리 필요성 증가
- 법률 자문, 외부 감사, 이사회 운영 인프라 등 규제 준비 비용 증가 가능성

거버넌스 부문의 정책 변화는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단기적으로는 제도 정비 부담이 따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자 신뢰 확보, 기업 가치 상승,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거버넌스 불투명성과 소액주주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국내 시장에 대한 신뢰를 낮게 평가해 왔으며, “한국은 ESG 중 G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왔다. 이에 따라 기업은 이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지속가능경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 III. 기업 대응 방안

이와 같은 국내 정책적 변화는 기업에게도 중대한 전략적 전환을 요구한다. 그러나 기업이 주목해야 할 변화는 이 뿐만이 아니다. PwC의 Value in Motion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후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 글로벌 차원의 거시적 이슈들이 산업과 경제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으며, ESG의 각 요소는 이러한 재편의 중심에서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운영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ESG는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신시장 진입, 지속가능 자본 조달,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기업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금은 ESG를 의무가 아닌 전략적 기회로 인식하고,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다음의 세 가지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ESG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1. ESG 전략 수립을 위한 규제 분석과 공시 기준 활용

정부의 ESG 관련 규제와 정책은 점차 정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모든 ESG 정책과 규제가 모든 기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규제의 적용 범위와 강도는 산업군, 기업 규모, 공급망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은 자사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와 정책을 선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ESG 공시 의무화는 대형 상장사를 시작으로 확대될 것이고, 자원순환 및 탈플라스틱 규제는 석유화학·소비재·식품 등 특정 산업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정책뿐만 아니라 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 및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미국의 위구르강제노동방지법(UFLPA) 등 글로벌 규제 흐름을 병행 분석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또는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 따른 리스크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대응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은 ESG 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핵심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는 국제사회가 기업에게 요구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한국 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추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이 온 클라이밋(Say on Climate)' 제도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의 기후 관련 공시 항목을 통해 기업의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고, 주주 참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만약, 국내 기준만으로 정보의 정합성과 범위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업은 CSRD/ESRS\* 또는 IFRS S1-S2\* 기준을 병행 적용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 및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ESG 공시는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정책 대응과 전략적 가치 창출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 CSRD/ESRS: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을 의미하며, ESRS는 지침을 수행하기 위한 공시 기준

\* IFRS S1-S2: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IFRS S1, S2'이며, S는 Sustainability(지속가능성)의 약자로 S1은 지속가능성기준서 1번, S2는 2번을 의미



## 2.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외부 기회 창출

기업의 ESG 전략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구조적 전환과 새로운 시장 기회를 동시에 모색하는 이중 축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 즉, 전략적 ESG 경영 수준에서는 ESG 요소를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고, 자본 유치, 브랜드 강화, 시장 확대 등 경쟁력 있는 기회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첫 번째 축은 **‘비즈니스 모델 혁신(Sustainable Business Transformation)’**으로, 기업 내부의 운영 구조와 기술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둔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은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가치를 창출하고 전달하며 수익을 얻는 방식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아래 예시가 포함된다.

- **탄소중립 기술 도입(RE100, PPA, 에너지 효율화 설비 투자)** → 저탄소·친환경 생산 방식으로 전환 및 새로운 고객층 확보
- **친환경 제품 개발**(바이오플라스틱, 저탄소 소재, 순환경제 제품) → 신시장 진출 및 프리미엄 가격 전략 마련 등
- **공급망 구조 개선**(ESG 실사 대응, 납품단가 연동제, 수입의존도 저하) → 장기적 신뢰 기반의 수익 모델로 전환
- **노동환경 혁신**(안전보건 공시제, 포괄임금제 폐지, 노동권 보호) → 인적 자본 중심의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로 수익 구조 개선

이러한 활동들은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구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자원순환 및 탈플라스틱 전략, 노동시장 개혁 등과 같은 정책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계된다.

두 번째 축은 **‘ESG 기반 가치 창출(Strategic Opportunity & Capital)’**로, ESG를 통해 외부 시장과 자본을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 **ESG 채권 발행**(녹색채권, 지속가능채권),
- **투자자 커뮤니케이션**(ESG/IR 보고서),
- **ESG 등급 향상 전략**(공시 정합성, 외부 독립기관 인증, 평가기관 대응),
- **브랜드 가치 제고**(지속가능한 제품 이미지, 사회적 책임 홍보) 등을 통해 ESG 기반의 경쟁력 강화와 자본 유치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축은 녹색금융공사 설립, ESG 평가체계 법제화, 공공조달 우대, 정책금융 인센티브 제공, 국민연금 등 공적자금의 ESG 투자 확대와 같은 정책 방향과도 연결된다.

### 3. ESG 전략 실행의 핵심: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리더십과 관심

ESG 전략이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권자(CEO, 이사회 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특히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최고경영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 **전사적 전략 연계:** ESG는 재무, 운영, 인사, 마케팅 등 모든 부문과 연결되므로, 이를 통합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최고경영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
- **자원 배분 결정:** 탄소중립 기술 도입, 공급망 개선, ESG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은 상당한 자본과 인력이 요구되며, 이는 경영진의 투자 결단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
- **조직 문화 형성:** ESG는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 가치에 초점을 두는 만큼, 조직 전반에 지속가능성 중심의 문화와 인식을 확산시키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결국, ESG 전략은 실무 차원의 대응을 넘어, 경영진의 비전과 의지가 반영된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 Contacts

## Sustainability Platform

### 스티븐 강 Partner

**Sustainability Platform Leader**, PwC Korea

Steven.c.kang@pwc.com | 02 709 4788

### 권미엽 Partner

Assurance, PwC Korea

miyop.kwon@pwc.com | 02 709 7938

### 이보화 Partner

Assurance, PwC Korea

bo-hwa.lee@pwc.com | 02 3781 0124

## Markets

### 류길주 Partner

gil-ju.ryu@pwc.com

### 장은영 Director

celia.e.jang@pwc.com

### 윤이나 Manager

ena.yun@pwc.com



삼일회계법인

삼일회계법인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회계법인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회계법인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회계법인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507W-RP-075

© 2025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All rights reserved. "PricewaterhouseCoopers" refers to Samil PricewaterhouseCoopers or, as the context requires, the PricewaterhouseCoopers global network or other member firms of the network, each of which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